



# 주간 통일정세

2012-26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조총련, 김정은 우상화 교육.. "총련단결" 강조(6/18, 연합뉴스)**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최근 조직 간부들을 상대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종만(조총련) 의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17일 일본 내 북한 민주화 운동 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주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달 28일부터 오사카에서 동 일본과 서일본 지부 위원장, 조선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2박3일씩 '단기 강습'을 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이달 21일까지 계속할 예정임.
  - A4 용지 25장 분량의 이 자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대의 나이에 주체사상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거나 '최첨단 과학기술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새벽 4시, 5시까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주체적인 군사 전법을 체득한 뒤 우리 식의 작전구상을 완성해 대학 강좌장의 탄복을 자아냈다'는 등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음.
  
- **北, 김일성훈장 초상화 '태양상'으로 바뀜(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일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금메달, 김일성청년영예상 메달, 김일성소년영예상 휘장 등에 새겨진 기존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태양상(김 주석 영정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태양상'은 김 주석의 영결식(1994년 7월19일)에 맞춰 만수대창작사 김성민 화백이 창작한 김 주석 영정사진으로, 김 주석이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형상한 것임.
  -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은 김 주석의 60회 생일을 맞아 1972년 3월20일 제정되었으며 김일성청년영예상은 같은 해 1월8일, 김일성소년영예상은 같은 해 3월9일 각각 제정됨.

- **김정은동향**
  - 6/22,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경상유치원·경상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칠색송어 선물(6.22,중방)
  - 6/24, 김정은 제1위원장, 창전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24,중방)



####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黨사업 개시 4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6.18 김영남·최영림·최룡해·리영호·김기남(보고)·문경덕(사회) 등 참가자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6.18, 중방·평방·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칠골남새전문농장(평양 만경대구역)과 룡천협동농장(黃北 황주군) 료해 및 평양산원 유선센터건설장 시찰(6.18, 중통·중방)
- 김영남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6.22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참관(6.22, 중통·중방)

### 나. 사회·문화

#### ● 北 "평양서 고구려시기 유적 발굴"(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평양시에서 고구려 시기의 성벽과 벽화무덤 등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통신은 "평천구역 안산동과 정평동 일대에서는 평양성 외성에 대한 부문 발굴이 진행돼 이 성이 잘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축조된 돌 성벽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성벽 기초축조 형식이 독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기와도 발굴됐다"고 소개함.
- 통신은 "만경대구역 선내동 일대에서는 적두산성에 대한 발굴과 실측을 진행하는 과정에 성벽 축조방법이 평양성의 축조방법과 같으며 성이 평양성의 서쪽 방어성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임.

#### ● 美친교농구단 첫 방북...5일간 체류(6/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한 선수로 구성된 미국 친교농구단이 16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시절 미국 프로농구에 매료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미국 선수단은 주로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서 활약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으며 루크 엘리 농구단 대표는 농구단이 평양에서 북한의 대학이나 직업 농구선수단과 경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선수단은 또 북한에서 평양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농구교실을 열 계획임.

#### ● 北, 옛 소련 시절 對러 채무 문제 타결(6/19,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이달 초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원) 상당의 채무 조정 및 상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러-북 관계에 정통한 모스크바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무 문제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스



토르차 러시아 재무차관이 북한 측과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1일 관련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채무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 난민지위 취득 탈북자 전세계 1052명(6/20, 미국의소리(VOA))

- 세계 각지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가 지난해 말 현재 1천52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통계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국가별 분포를 보면 영국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 25명 등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각지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생활하는 탈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됨.
- UNHCR는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가 작년 말 현재 490명이라고 밝혔으며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합하면 모두 1천542명으로 전년보다 347명이 늘어남.

#### ● 농촌경제연구 "北가뭄 계속 땀 7~8월 식량난 심각"(6/20, 연합뉴스)

- 북한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7~8월에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북한의 가뭄 실태와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곡창지대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4월 말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량이 평년의 10%에 불과하며 6월 말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리시설이 부족하고 밭농사 비중이 높은 북한 농사에 심대한 악영향이 예상됨.

#### ● 北, 일반 주민에도 금강산 관광 허용(6/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 일반 주민에게 금강산 관광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남도 주민 민모씨는 RFA에 "요즘 당국에서 각 기업소, 단위별로 금강산관광단을 조직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금강산 관광이 일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관광단이) 많이 조직된 것은 올봄 이후"라고 전함.
- 민씨는 "함경남도 기업소의 경우 보통 2박3일 일정에 1인당 관광요금은 미화로 30~50달러 정도"라며 "교통수단은 기업소 소속의 대형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했고 "금강산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소 간부



나 지방 간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반인들이며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관광단을 꾸리는 데 인원이 모자라 돈만 내면 아무나 갈 수 있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함.

● **평양 창전거리는 21세기 北 첫 '뉴타운'(6/22,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작년 5월22일 착공 이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새로운 거리가 평양시 중심부에 일떠서게 됐다"고 전함.
- 평양의 중심부에 창전거리가 완공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올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뉴타운' 건설 구상이 실현됨.
- 조선신보는 "창전거리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있는 만수대언덕 주변의 일각에 꾸려졌다. 만수대지구의 면모를 일신하는 건설사업은 평양시 내 대규모 건설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온 것"이라고 소개함.

● **北, 원산 바닷가에도 놀이공원 건설(6/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의 바닷가에 놀이공원을 새로 건설 중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전함.
- 방송은 "원산시의 풍치 수려한 해변에 유희장이 새로 건설된다"며 "유희장에는 우주비행선, 2중회전반, 회전그네, 함마(해머)치기 등 현대적인 유희시설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소개함.
- 놀이공원에는 전자오락장, 수영관, 청량음료점도 들어서게 된다고 방송은 전했고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원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유희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며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가뭄으로 식량난 재연 가능성(6/23, 연합뉴스)**

- 북한에 가뭄이 계속돼 또 다시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원조단체 관계자가 22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비정부단체 벨트홍거hilfe 책임자로 약 1주일간 북한을 돌아보고 중국에 도착한 볼프강 야만은 중국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 방문 기간에 남쪽 2개 도에서 아이들이 병이나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농작물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전함.
- 그는 "지난 60년래 최악의 가뭄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면서 "북한이 주요 작물인 벼와 양배추, 옥수수를 심는 철이지만 가뭄으로 농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함.

● **北 해외근로자 월급 본인 몫 10~20% 불과(6/24, 아사히신문)**

- "북한이 체코 합작 봉제공장에 파견한 근로자는 월 150달러를 받지만 자신이 손에 쥐는 돈은 3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고 아사히신문은 24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 지배와 간섭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함.

- 비망록은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에서 침략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훈련을 강행하면서 여기에 남조선 괴뢰와 일본까지 끌어들이어 우리에게 대한 봉쇄망을 확대하려 한다"며 미국을 비난함.
-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가담해 가장 악질적으로 날뛰는 것은 이명박 역적패당"이라며 "이명박 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제재책동에 적극추종해 돈줄이니 군사전용이니 뭐니 하면서 북남교류를 차단해 버렸다"고 비난함.

### ● 美상원, '對北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종합)(6/21,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의 대(對)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미국 상원의 '거물급 인사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됨.

### ● 中, 유엔 대북 제재결의 위반 21건 관여(6/22, 아사히신문)

-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對)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무기와 사치품 등의 수출입에 대거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38건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에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함.
- 중국이 관여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북한의 사치품 수입 13건 등임.
- 북한은 무기 및 사치품 수출입 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중개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이며 특히 11건의 경우 중국 동북부의 항만 도시인 다롄(大連)이 무대가 됨.

### ● 中, 압록강변 北지역서 첫 재난훈련(6/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최근 북한과 접경지역인 압록강변 북한 지역에서 홍수 대비 긴급 재난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매체를 인용해 23일 전함.



- 중국 관영매체인 중신사(中新社)는 단둥발로 중국 당국이 지난 15일 북중 접경의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홍수 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했다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건설·교통·안전 부서와 신압록강대교 건설본부 등에서 모두 110명의 인원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훈련은 위험 경보, 응급 처치, 인원 철수, 사후수습 등 네 단계로 나뉘어 1시간 동안 진행됨.

### ● 北, 日 언론에 일본인 묘지 공개(6/23, 교도통신)

- 북한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을 초청해 태평양전쟁 말기 북한에 있다가 사망한 일본인의 묘지를 공개했는데 평양 근교에 있는 일본인 묘지 2개소와 유골 등이었음.
- 북한은 이들 묘지와 유골이 2차 세계대전 말기 북한에 남아있다가 숨진 일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함.

####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6.18 미국의 '反北 무력증강책동'(駐韓美軍 공격용헬기 추가배치 언급·韓美日 합동군사연습 발표·韓美2+2회담)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자위적국방력 백방강화" 공언 중통기자 대답(6.18, 중통·중방·평방)
- 北 외무성 대변인, 6.24 韓·美軍의 합동실탄사격연습時(6.22) '인공기를 과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의 反北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자위적 핵억제력 더욱 강화" 공언 담화 발표(6.25, 중통·중방)
- 6.25전쟁'은 "미국의 식민지 약탈정책이 가져온 만고죄악"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무력증강·군사훈련 등 미국의 '北 남침위협' 대비 對한반도 군사정책 비난(6.24, 중통/제2의 6.25전쟁을 몰아오는 미제)

## 3. 대남정세

### ● 北 "남측에 금강산 관광길 이미 열어줬다"(6/18, 우리민족끼리)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우리는 지난해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고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기업가들이 새로운 관광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남측 기업인들도 우리가 취한 조치에 공감을 표시하며 금강산 국제관광에 참가하고 싶은 의향을 표시했었다"며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남측 관광객 없이 관광재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느니 뭐니 하는 심술궂은 소리만 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 비난함.

- 이 매체는 최근 강원 고성군을 찾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남조선당국이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하며 운운하는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현정은)의 평양방문 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 준 문제"라고 주장함.

● **北경비정 동해 NLL인접 해역으로 남하..한때 긴장(6/19, 연합뉴스)**

- 북한 경비정 한 척이 1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쪽으로 남하해 해상에 경계강화 조치가 내려지는 등 한때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께 북한 소형 경비정 한 척이 평소 활동 반경보다 넓은 NLL 인접 해역까지 남하하였으며 영동 북부 해상에는 어선들의 출어가 제한되고 조업중인 어선에도 철수지시가 내려졌음.
- 이후 남하했던 북한 경비정이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해상에 내려졌던 경계강화 조치는 오전 6시40분께 해제됨.

● **北 '6·25 복침설' 거듭 주장(6/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자료를 통해 본 조선전쟁 도발자의 정체'란 글에서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제패를 위한 첫 걸음으로 도발한 범죄적인 대량살육전쟁이었다"며 일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함.
- 통신은 일본도서 '미국은 패했다'란 제목의 도서를 인용해 1949년 10월 육국사령부에서 열린 사단장회의에서 한국 주둔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가 "앞으로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진공은 오직 미 군사사절단의 명령에 의해서만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전 국군 17연대 참모장교 한수한이 '1950년 6월24일이 토요일이었음에도 장교들은 외출이 금지되고 전쟁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24일 밤에 25일 새벽을 기하여 38도선을 돌파, 북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할 데 대한 비밀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고도 주장함.



■ 기타 (대남)

- 李대통령의 對北발언(폐쇄된 사회, 내부사정 등)을 '대내외정책의 총과산과 특대형 부정부패사건으로 민심을 잃은 산송장의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비난 지속(6.23, 중통·민주조선/이○○역도의 반공화국 망발을 규탄)
- 南 인민들은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중북세력이 아니라 중미를 연명으로 삼는 李○○역도와 새누리당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선동(6.23, 평방/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중미세력)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한-캐나다 "북한, 핵·미사일 중단해야"(6/19)

- 한국과 캐나다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 등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로스카보스 힐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음. 두 정상은 또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증대는 물론, 셰일가스 등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 두 정상은 이어 내년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점에 주목하고 1993년 아시아·태평양 경제동맹체(APEC) 정상회담 계기에 수립된 '한-캐나다 특별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 이 대통령과 하퍼 총리의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 다섯 번째 회동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 ● 오바마, 대북 제재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6/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음.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이며,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됨.
-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협,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국가비상' 대상의 이유로 밝혔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지난해와 같음.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이며,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음.
-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음.

● "中, 유엔 대북 제재결의 위반 21건 관여" (6/22)

-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對)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무기와 사치품 등의 수출입에 대거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38건으로 집계하고 있음. 이 가운데 21건에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음. 중국이 관여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북한의 사치품 수입 13건 등임.
- 북한은 무기 및 사치품 수출입 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중개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임. 특히 11건의 경우 중국 동북부의 항만 도시인 다롄(大連)이 무대가 됐음. 이는 중국이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과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유엔 안보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공표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2012년도 판 보고서 발표에 동의했음. 이에 따라 유엔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작년 8월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 운반 차량인 대형 특수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 잇단 침략전쟁준비책동...정전협정 위반"(6/18)

- 북한 외무성은 18일 "우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침략전쟁 준비책동을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의 대북 관련 발언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라며 이 같이 밝혔음. 대변인은 "미국은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지만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적대시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긴장 격화를 산생시키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속심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의 총진군에 장애를 조성하고 남조선을 그들의 침략전쟁정책의 하수인으로 철저히 예측시키자는 데 있다"고 주장했음.
- 한편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2일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헬



기 1대대 증강과 탄도·유도탄 방어 전력 확충을 미 국방부와 합참에 요구했다고 밝혔음. 또 한미 양국은 13~14일(현지시간)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문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음. 이와 별도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21~22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실시됨.

#### ● 美친교농구단 첫 방북...5일간 체류(6/19)

-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한 선수로 구성된 미국 친교농구단이 16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음. 미국 직업선수 출신으로 구성된 농구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처음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시절 미국 프로농구에 매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미국 선수단은 주로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서 활약한 선수들로 구성됐음.
- 루크 엘리 농구단 대표는 농구단이 평양에서 북한의 대학이나 직업 농구선수단과 경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선수단은 또 북한에서 평양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농구교실을 열 계획임. 엘리 대표는 한국에서 외국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중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음. 올해 초부터 미국 친교농구단의 방북을 추진한 엘리 대표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동두천과 의정부에서 살면서 분단된 한반도의 모습을 체험했다"며 "이 시절의 경험으로 스포츠를 통한 북한과 외부 세계의 교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농구단의 방북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북한 당국의 입국 비자를 받기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고 전했음. 엘리 대표는 "방북과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을 인정한다"며 "순수한 스포츠 교류와 정치 상황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美상원, '對北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6/22)

-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음.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의 대(對)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음.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음.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상원의 '거물급 인사'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음.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9월 만료됨. 따라서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2017년까지 적용됨.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카일(애리조나) 의원도 예외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식량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기금을 북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찬성 43표, 반대 56표로 부결됐음.

-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 개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음. 이 개정안은 상원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예외조항이 없어 법 운용의 융통성이 아예 없음.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하원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해 달라고 상원에 요청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절충안으로 '적절한 모니터링(분배 감시)이 보장되고,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조건에서만 대외 식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지목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서명했음.
- 한편, 미국은 2009년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 이후 식량 지원을 중단했음.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만t의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 간 '2.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된 상태임. 외교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 법이 대통령의 예외 적용 조항을 뒀 내용상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적시해 식량 지원을 제한하는 만큼 통과되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논란이 되는 다른 수십개 조항에 섞여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상황"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등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 중·북 관계

##### ● "中, 인천상륙작전 후 北 철수작전까지 조연"(6/23)

-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수세에 몰려있던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을 직접 투입하기 이전부터 북한군의 철수작전까지 조연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 연합군의 공세에 밀려 북한이 국경을 넘어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철수할 것에 대비해 동북지역에 사는 조선족들 가운데 운전사, 의료진, 공장과 광산 엔지니어 등을 선발해 지원부대를 편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북한연구담당인 제임스 퍼슨 연구원이 중국중앙문헌연구소(中共中央文獻研究室)이 2008년 출판한 '저우언라이문고(建國以來周恩來文稿)'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음. 연합뉴스는 23일 우드로윌슨센터로부터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했음. 우드로윌슨센터는 한국의 경남대 북한대학원과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과 관련된



사료들을 발굴하고 있음.

- 이번에 발굴된 34건의 자료를 보면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는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후방 철수가 최대 과제였던 1950년 10월1일 김일성에게 전보를 보냄. 이 전보에서 저우언라이는 "인민군 제1군단 소속 8개 사단 병력을 두개로 나눠 4개 사단 병력은 적(연합군)을 피해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나머지 4개 사단 병력은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도록 조언했음. 이 전보는 당시 북한 주재 중국대사인 니즈량(倪志亮)을 통해 김일성에게 전달되도록 했음. 그리고 다음달 다시 보낸 전보에서는 "혼란에 빠지거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희망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위로하기도 했음. 저우언라이는 앞서 9월20일 니즈량 대사에게 전보를 보내 "김일성 동지에게 전하라"면서 "인민군은 무조건 38선 이북지역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이어 북한의 주력부대는 "적군과 정면대치하고 있어 자원 손실이 커진다"고 전제한 뒤 "적군이 서울을 장악한다면 인민군의 퇴각로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며 북한의 주력부대는 "기동성에 집중해 적군의 약한 부분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세세한 작전까지 언급했음. 그러면서 "친구이자 동지로서 하는 조언이니 옳건 그르건 더 숙고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음. 저우언라이는 그해 10월14일 스탈린에게 서한을 보냄. 소련 공군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시 폭격기 지원을 포함해 8가지의 지원항목을 상술하면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음.
- 중국은 또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경우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의 지휘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소련의 스탈린의 '지침'을 구하기도 했음. 1950년 11월17일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에 보낸 전보에는 "스탈린 동지로부터 중국의 단일 지휘체제에 대해 승인이 왔다"면서 북한 김일성의 반응을 살필 것을 지시함.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사령관이 되는 합동지휘체제에 합의했음. 퍼슨 연구원은 "중국이 참전 전부터 북한의 군사작전을 전술적인 부분까지 조언하는 등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저우언라이문고 등 중국측 자료를 더욱 많이 발굴하면 한국전쟁의 새로운 면을 더욱 많이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라. 일·북 관계

### ● "日경찰, 조선신보 前간부 사기혐의 체포"(6/22)

- 일본 경찰이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조총련 기관지의 전 영어판 편집장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오사카부 경찰 외 사과 등은 21일 효고(兵庫)현 아미가사키(尼崎)시의 운송회사 사장 Y(41)씨와 일본인 O(65)씨를 체포했음.
-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운송회사가 석면을 제거하는 신규 사업을 한다고 꾸며 2009년 2월 효고현의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 중에서



분진 제거 장치 구입비 1천만엔(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채ن 혐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사기는 명목상의 체포 혐의일 뿐이고, 일본 경찰이 Y씨를 북한 공작기관인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의 공무원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Y씨는 원래 재일 조선적(籍·일본 법률상 무국적)으로 조총련계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영어판 편집장을 지냈음. 이후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 지금은 한 국립대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음.

- 지난해 3월에는 북한 정보를 취급하는 한 일본 내 민간단체에 들어갔고 이 단체의 책임자를 중국으로 납치하거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두 달에 한 번씩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정찰총국 간부를 접선했다는 의혹도 있음. 이 단체는 한일 수사 당국으로부터 '수상한 인물'이라는 조언을 받고 미리 Y씨를 해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마. 러·북 관계

##### ● 北, 옛 소련 시절 對러 채무 문제 타결(6/19)

- 러시아와 북한이 이달 초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원) 상당의 채무 조정 및 상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관계에 정통한 모스크바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무 문제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스트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이 북한 측과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1일 관련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채무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의 파격적 행보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시아와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무 조정과 상황에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가 상당 정도의 채무액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 러-북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는 방식의 협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 교역 과정 등에서 발생한 북한의 채무를 110억 달러로 산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북한 측과 채무 조정 및 상황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여옴. 러시아 유력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지난해 9월 자국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러시아가 대규모 채무 탕감 결정을 내린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됐음. 우선 북한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지금도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으로 식량과 연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는 것임. 둘째로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가스 and 전력을 공급하고 시



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등의 북한을 끌어들이야 하는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음. 셋째로 북한이 이전에도 채무 상환을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탕감을 주장해와 실질적으로 북한의 자발적 채무 이행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고려됐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 역대 최대규모 통합화력전투 훈련>(6/18)

-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우리 군과 미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통합 화력전투 훈련을 함. 국방부는 22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김형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전투의지를 확인하는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을 한다고 18일 밝혔음. 훈련은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여단, 5포병여단 등 14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 미군 아파치 1개 부대 등 총 38개 부대, 2천여명의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됨. 특히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 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와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력화한 경공격기(T/A-50)가 처음 참가함. 육군의 신형 대포병레이더(아서)와 군 위성통신체계, 원격 사격이 가능한 K-4 무인기관총 등도 처음 공개됨.
- 1~2부로 진행되는 훈련 중 1부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초소에 대한 적의 총·포격 도발시 대응 절차와 화력 도발 탐지와 대응방법 절차, 합동전력 동원 절차를 숙달함. 2부에서는 6·25전쟁 같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상해 한미 연합 전력이 이를 저지 격퇴하는 과정을 보여줌. 3대의 F-15K 전투기에서 MK-84 폭탄 4발을, 2대의 KF-16 전투기에서 MK-20 폭탄 12발을 각각 투하하고, K1A1 전차와 미군 M2A3 브래들리 장갑차가 포격과 함께 기동함. 미군 아파치 헬기 4대도 출격해 기총 사격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임. 탱크 킬러인 미 A-10기 4대가 30mm 기관총 수천 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 130mm 다연장로켓 2문도 전 전차 표적을 향해 불을 뿜음. 공군 C-130 수송기가 아군 진지에 탄약과 식량을 투하하고 진지 점령을 위해 특전사 60명이 강하하는 것으로 훈련은 종료됨.
-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육군의 차기전차 흑표(K-2), K-21 장갑차, 다연장로켓(MLRS),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미군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50종의 장비 견학 행사도 마련됨. 국방부는 국내외 주요 인사와 안보단체, 각국 무관, 일반인, 학생 등 3천여명을 훈련에 초청했음.

#### ● 한미, 23~25일 연합 해상기동훈련 실시(6/22)

- 한국과 미국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해에서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한다



고 합참이 22일 밝혔음. 서해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10여척의 함정과 잠수함이 참가함.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미국 F-18 슈퍼 호넷 등 함재기도 동원됨. 양국 해·공군 병력 8천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해군 7기동전단과 미 항모강습단의 상호 작전운용성을 높이고, 미 함재기와 한국 전투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정해 이를 공동으로 탐지, 추적하는 연습을 하고, 수중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의 탐색 격퇴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해군 5전단장 박성배 준장은 "한미 양국군의 결연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 줄 것"이라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한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매년 동·서해에서 교대로 실시하고 있음. 중국은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나. 한·중 관계

### ● 韓·대만, 7월부터 무비자 체류 90일로 연장(6/21)

- 내달부터 한국인 여행객이 비자 없이 대만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연장됨.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대만 외교부 고시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21일 밝혔음. 한국 외교부도 한국을 찾는 대만 관광객 등에게 7월 1일부터 같은 조건의 비자 면제기간을 적용함. 한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까지 허용했음. 양측은 최근 김포공항과 대만 쑹산(崧山)공항 직항 노선을 신설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

### ● 베이징서 한중 수교 20주년 여성교류행사(6/24)

- 여성가족부와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한·중 동반 성장을 위한 여성 교류 협력 강화' 포럼 등 교류 행사를 함. 24일 여성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초청으로 경제계·학계·문화계 등 20여 명의 한국 대표단이 참가해 기념 포럼, 한·중 여성정책 사진전, 고위급 면담 등을 함. 기념 포럼은 '여성과 사회발전' 및 '여성과 경제발전'이라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됨.
-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여성 역할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여성 지도자간 협력과 교류 강화 증진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임. 김 장관은 또 천즈리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주석과 만나 양국 여성정책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국 교육부와 베이징 대학을 방문해 청



소년 정책과 양성평등 교육 협력을 논의함. 한·중 여성 교류는 수교 15주년인 2007년에도 개최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함.

#### 다. 한·일 관계

##### ● 한국 농민, 日 도쿄서 "독도는 우리땅" 1인 시위(6/20)

- 전북 남원에 사는 한 농민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세번째 방일 시위를 벌였음. 남원시 주천면에서 조경수를 기른다는 노병만(49) 씨는 20일 도쿄 신주쿠(新宿)에 있는 도쿄도(都) 1청사 앞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어넣은 흰 두루마기 차림에 태극기를 들고 침묵시위를 했음. 이날 낮 일본에 도착했다는 노 씨는 오후 2시께부터 4시간가량 1인 시위를 했음. 우익단체 회원들과의 충돌은 없었음. 노 씨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글로 적어넣었고, 일본어로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쿄도청 앞을 지나는 시민들은 그가 한국인이라고 추측할 뿐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음.
- 노 씨는 지난 4월 쓰시마(對馬)섬과 후쿠오카(福岡)를 시작으로 5월에는 오사카에서 시위를 했고, 이번달 도쿄로 향했음. 21일에는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임.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전역을 돌며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했음. 노 씨는 "역사교과서 왜곡도 일종의 침략"이라며 "우리 정부가 너무 약해서 이러다가는 독도를 빼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음. 노 씨는 부친이 17살 때 일본 탄광에 끌려가 7년 동안 갖은 고생을 했고 다리도 다쳤다고 소개했고, 자신은 일제의 만행에 울분을 느끼는 평범한 시민일 뿐 독도 관련 단체에는 속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 "日に 있는 한국 징용자 유골 6천700구" <아사히>(6/21)

-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일본에 징용됐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6천700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 정부 조사 결과 일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징용자 유골 2천691구 외에 4천21구의 유골이 더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해 보관하고 있다고 통보한 유골 외에 94개소에 유골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음.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들 유골의 반환도 요구할 방침임. 이들 유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또는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의 탄광이나 군수공장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숨진 이들의 유골임. 일본 정부는 2010년 8월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담화에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금후에도 성실히 실시해 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한국 정부는 일본 부담에 의한 유골 반환을 요구하며 교섭을 하고 있으나 아직 반환이 성사되지 않고 있음.



## 라. 미·중 관계

### ● 美 하원, '중국인 배제법' 사과 결의안 승인(6/19)

-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중국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중국인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을 사과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음. 앞서 상원도 지난해 10월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1882년 제정돼 1943년 폐지된 이 법은 미 연방정부가 민족의 잣대로 이민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최초이자 유일한 법이었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이 법을 지목하며 중국-미국 관계를 이간질하자 법이 폐지됐음.
- 미 의회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코커서스(CAPAC) 민주당 대표인 주디 추 하원의원은 "오늘은 중국계 미국인 사회의 역사에 드문 순간"이라고 환영하며 "상·하원이 중국 이민자들을 타깃 삼은 이 법의 추하고 비(非)미국적인 점을 공식 인정했다"고 말했음.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에는 10만명 이상의 중국계가 살고 있었음. 이들 대부분은 대륙횡단 철도 건설 현장에서 고된 일을 했다고 CAPAC 이민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마이크 혼다가 설명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도덕적 권위를 갖추려면 우리 내부에 있는 선입견을 거부한다는 점을 공언해야 한다"고 의미 부여했음.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결의가 과거 행위들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말했음.

### ● 후진타오, 오바마에 새 양국관계 위한 4가지 제안(6/20)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중 관계 모델 구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음.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은 먼저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증진을 강조했다. 특히 미중 고위층 간 방문, 회동, 전화 통화, 서신교환 등의 방법으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 주석은 두 번째로 무역·투자·법집행·교육·기술, 그리고 에너지·사회기반시설·건설 분야에서 '윈-윈(Win-win)'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아울러 정치·경제·안보·문화 방면의 실질적인 소통, 협력, 교류를 확대하자고도 했음. 후 주석은 세 번째로 양국이 서로 차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간섭을 피하자고 주문했음. 후 주석은 미국이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대(對) 중국정책을 펴달라고 말했음. 그는 특히 미국의 국내 문제가 미중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 평화적 발전을 지원해달라고도 했음. 후 주석은 네 번째로 미중 양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공동 실천하고 세계적 도전에 함께 맞서자고 역설했음. 후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각국 간에)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은 미국과 솔직한 대화와 실질적



인 협력, 상호 신뢰를 증진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또 미국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며 중대한 지역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조화를 해달라고 주문했음.

-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후 주석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이해에 들어맞으며 마찬가지로 번영하고 성장하는 미국이 중국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음. 미중 무역과 관련해 후 주석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양국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두 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미중 정상회담은 로스 카보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폐막후 이뤄졌음.

#### 마. 미·일 관계

##### ● 日 오키나와 주민 "美 수직이착륙기 배치 반대" 집회(6/18)

-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잇달아 추락 사고를 낸 미국 수직이착륙기 수송기 V-22 오스프리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음. 오키나와 주민 5천2천명(주최측 추산)은 17일 기노완카이힌(宜野灣海浜)공원에 모여 "시민을 위협에 빠트리는 오스프리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사키마 아쓰시(佐喜真淳) 기노완시 시장은 "3개월간 두차례나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주택에 인접한 후텐마 비행장에 오스프리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음. 사키마 시장과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19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 등에게 오스프리 배치 중단을 요청할 예정임.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의 41개 시초촌(市町村·기초자치단체) 중 40곳이 이미 배치 반대 의견서나 결의를 채택했고, 여당인 민주당 오키나와 지부에는 "당 분리" 얘기까지 나온 상태임. 미군 후텐마 비행장은 오키나와의 주요 도시인 기노완시 중심에 있음. 이 때문에 2004년 8월 기노완시 오키나와국제대학에 미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등 종종 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를 냈음. 미군은 내달 시험 비행을 거쳐 후텐마 기지에 미 해병대용 기종인 MV-22 오스프리를 배치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오스프리가 4월(모로코)과 5월(미국 플로리다)에 잇따라 추락사고를 일으키자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당분간 배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음.

##### ● <日, 美 수직이착륙기 배치 '깊어지는 고민'>(6/19)

- 미군이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수직이착륙기 수송기를 두고 일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19일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을 만나 미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오키나와 주민 5천200명이 17일 집회에서 채택한 결의문도 전달했음. 오키나와 주민들이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최근 이 비행기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임. 4월 모로코에서 추락사고로 4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음. 미군은 내달 20일께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 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한 뒤 후텐마 기지에 오스프리를 배치할 계획임. 현재의 수송 헬기 CH-46을 대체함. 일본 정부는 사고가 잇따르자 일단 당분간 배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배치 계획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문제는 오키나와에 그치지 않음. 미군이 후텐마 배치에 이어 도호쿠(東北)와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등지에서 저공비행 훈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군은 6개 루트에서 연간 330차례 훈련할 예정임. 최저 고도는 약 150m이고, 훈련 중 30%는 저녁과 밤에 실시함. 오스프리의 항속 거리가 CH-46의 5배를 넘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키나와에서 시즈오카현 캠프 후지나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로 장거리 이동하면서 이 같은 저공비행 훈련을 할 계획임. 방위성 관계자들은 18일 시코쿠 지방의 도쿠시마·고치·에히메현에 찾아가 훈련 계획을 설명했다가 반발을 샀음.
- 일본측은 오스프리 배치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를 방법이 없는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미국은 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임.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회담에서 "오스프리는 장시간 안전하게 비행한 기록이 있고, 고성능 비행기라는 걸 보증한다"며 배치 강행 의사를 밝혔음. 미국이 오키나와에 집중됐던 동아시아 미군을 괌과 호주 등지로 분산·배치하려면 오스프리처럼 장거리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송기가 필요함. 레이더망을 피해서 적진 깊숙이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저공비행 훈련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임.
- 중간에 낀 일본 정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임. 골치 아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3일 오키나와 전몰자 추모식에 참석 하더라도 나카이마 지사와 회담은 미루기로 했음.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이점을 합친 세계 첫 실용 틸트로터(경사식 회전날개)기임. 영어로 '물수리'라는 의미임. 최고 시속 약 500km를 낼 수 있고, 보조연료탱크를 사용하면 3천590km를 날아다닐 수 있음.

#### ● 日 지방의회, 美 수송기 배치 반대(6/22)

-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시 의회는 22일 주일 미군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를 이와쿠니 공군기지에 일시 배치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시 의회는 결의안에서 모로코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오스프리가 추락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오키나와 배치에 앞서 이와쿠니 기지에 일시적이거나



마 배치하는 것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시 의회는 이어 "오스프리 추락 사고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시도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시 의회 32명 의원 가운데 29명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3명은 기권했음. 일본 측의 우려와 관련,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일본 대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임.

- 이에 앞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현 지사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을 만나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일본 국내에서 오스프리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근 이 비행기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임. 4월 모로코에서 추락사고로 4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지난 13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에서도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음. 미군은 내달 20일께 이와쿠니 기지에서 시험비행을 한 뒤 후텐마 기지에 오스프리를 배치할 계획임. 이는 현재의 수송 헬기 CH-46을 대체하려는 것임.
- 미군은 후텐마 배치에 이어 도호쿠(東北),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등지에서 저공 비행훈련을 계획하고 있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군은 6개 루트에서 연간 330차례 훈련할 예정임. 최저 고도는 약 150m이고, 훈련 중 30%는 저녁과 밤에 실시함. 오스프리는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이점을 합친 세계 첫 실용 틸트로터(경사식 회전날개)기임. 영어로는 '물수리'라는 의미임. 최고 시속 약 500km를 낼 수 있고, 보조연료탱크를 사용하면 3천590km까지 이동할 수 있음.

## 바. 미·러 관계

### ● "러-美 정상회담 매우 긍정적"〈러 공보실장〉(6/19)

- 멕시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 공보실장이 18일(현지시각) 밝혔음.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페스코프 실장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이루어진 (러-미 관계의) 긍정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같은 긍정적 과정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며 "회담 도중 두 나라 정상은 공통의 의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더 자주 만나자는 합의와 함께 회담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상) 대화가 건설적이고 솔직하게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양국이 이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아주 명확해 졌다"며 "대화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다"고 평가했음.



## 사. 중·일 관계

### ● "中, 日오키나와 미군기지까지 감청 가능"(6/19)

- 중국이 자국 본토에서 대만 전역뿐 아니라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 섬까지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미국 군사전문지를 인용해 19일 보도했음. 주간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성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 기지의 고해상도 구글어스 위성사진 등을 최근 분석한 결과,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파라볼릭 안테나들이 확인됐음. 이는 기술과 장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대만해협을 넘어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까지 통신 내용을 엿듣는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라고 이 잡지는 설명했음.
- 잡지는 특히 "대만 북부권에서 발신되는 모든 전자 신호들이 이 감청부대에 의해 포착될 수 있으며 이는 유사시 중국군에 의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역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음. 푸젠성 동경(東京)산에 위치한 이 감청기지는 1965년 미국 공군의 정찰활동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음. 이 기지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800km, 대만 서부해안에서 140km 떨어져 있음.

### ● 일본인 10명 중 8명 "중국 싫다"(6/20)

- 일본인들의 대중 감정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의 민간 비영리단체인 '언론 NPO'와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리는 20일 일본인 1천명과 중국인 1천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일본인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6%포인트 늘어난 84.3%였음.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악이었음.
- 중국이 싫은 이유를 여러 개 고르라는 문항에는 '자원 에너지 확보 시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았고, '오키나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는 답변은 48.4%였음.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답변한 중국인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1.4% 내려간 64.5%였음. 일본이 싫은 이유로는 '과거에 전쟁을 한 일이 있다'(78.6%)거나 '일본 정부가 센카쿠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39.8%)'라는 답변이 많았음. 일본인 중 27.2%, 중국인 중 50.2%는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일 간에 군사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음.
- 중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양국민 모두 약 80%나 됐지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적었음. 중국인 중 '이는 일본 정치가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를 거론한 이는 11.8%에 불과했고, 일본인 중 중국 차기 지도자로 떠오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도 22.1%뿐이었음.



## 아. 중·러 관계

### ● <러-中, 군사기술 정보 놓고 스파이 논란 조짐>(6/21)

- 러시아와 중국 간에 첨단 무기 기술 정보 유출을 둘러싼 스파이 논란이 가열될 조짐임. 중국 정보부가 러시아 과학자 매수 등을 통해 러시아의 차세대 핵전력 초석이 될 잠수함 발사 탄도 핵미사일(SLBM) '불라바'(Bulava·철퇴) 제원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불라바 핵미사일 기술 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된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소속 교수 두 명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RIA와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음.
- 러시아 내 방첩 활동을 담당하는 연방보안국(FSB)에 털미가 잡힌 두 사람은 중국 정보기관에 매수돼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했음. 이들은 지난 2009년 중국 여행 중 중국군 정보기관에 불라바 관련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이듬해 3월 FSB에 체포돼 기소됐음. 일련의 시험 발사 실패 과정을 거친 불라바는 조만간 러시아의 차세대 전략 핵미사일로 배치될 예정임. 두 사람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음. 중국 측은 또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는 신형 핵 탄도미사일 '토폴-M'(Topol-M)과 신형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Iskander)관련 기술 정보도 두 사람을 통해 입수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FSB 소식통은 밝혔음.
- 이와는 별도로 FSB는 지난해 러시아의 신형 대공미사일 관련 기술 정보를 수집하려 한 중국의 비밀공작원을 체포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체포된 비밀공작원은 공식 대표단의 통역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다 털미가 잡혔음. FSB 산하로 과학자들의 기밀 유출 탐지와 방지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위원회(CDS)는 두 교수가 중국 측 매수 공작의 희생자라고 밝혔음. 재판부도 두 사람이 돈을 받고 넘긴 불라바 정보는 러시아 핵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음. 실제로 러시아는 빠르면 올해 중으로 불라바를 탑재한 '보레이'(Borei)급 신형 핵잠수함을 태평양함대에 실전 배치할 계획임.
- 지금까지 중국은 성능이 떨어지는 군사장비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핵미사일 등 최첨단 장비 관련 정보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매수나 미인계 등을 통한 협박 수법으로 입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보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런 방식을 통해 입수한 러시아 군사 기술 정보를 이용해 복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신형 수호이 T-50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 일부라고 밝혔음.



## 자. 일·러 관계

### ● 러·日 정상, 영토문제 교섭 재개 합의(6/19)

- 일본과 러시아 정상이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협의 재개에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음.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지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 시간) 회담에서 영토문제 논의를 '재활성화'하기로 합의했음. 노다 총리는 쿠릴열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외교장관 레벨의 실무협의를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음. 노다 총리는 과거의 합의와 문서,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음. 이는 지난 1956년 '평화조약 체결후 러시아가 쿠릴열도 4개섬 가운데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2개섬을 일본에 인도하기로 한' 일·소련 공동선언을 염두에 둔 것임.
-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영토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외교장관급, 사무 레벨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해 가자"고 회답했음. 하지만, 양국의 영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함. 일본은 지금까지 쿠릴열도 4개 섬의 모두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러시아는 이를 일축했음. 푸틴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관련 "일본 기업이 러시아에 더욱 많이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음. 노다 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기지의 건설 계획 실현과 향후 개발이 예정된 사할린의 석유·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의 일본 기업 참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한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영토문제 협의를 위한 '개시' 구호가 떨어졌다"면서 러시아 측과 올여름 모스크바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음.

### ● "러-日 정상, 쿠릴열도 문제 협상 재개키로"(6/23)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양국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음.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지난 18일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양자회담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 절제되지 않은 선언들을 피하고 침착하게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노다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평화조약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향후 대화를 선동적이고 절제되지 않은 선언들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침착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해 나가는데 양국 정상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소개했음.
- 러시아와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2차대



전 후 러시아가 차지한 쿠릴열도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영토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문가 수준에서 계속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이에 푸틴 대통령은 외무부에 이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대화를 해나가도록 지시했음.

## 차. 기 타

### ● 印尼-日, 북한·남중국해 협력 합의<日언론>(6/19)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북한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음. 통신은 일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양국 정상이 전날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 후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일본 관리들은 또 유도요노 대통령이 1970~80년대 북한 요원들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말했다.
-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 관련국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등 기본 원칙들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음.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전략적 장관 대화와 경제 장관 협의, 국방장관 회담 등 3개 분야 장관급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 관리들이 밝혔음. 통신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와 함께 일본이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과 에너지 개발 등 경제 개발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 ● "러·中·이란·시리아 합동훈련설 오보"(6/20)

-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조만간 시리아 영토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일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시리아 대통령 정치·공보 담당 고문 부세이나 샤이반이 19일(모스크바 시간) 밝혔음.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샤이반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그같은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훈련은 계획돼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음. 앞서 이란 언론과 이라프 TV 방송 등은 몇 주 내에 시리아 영토와 영해에서 4개국 합동 군사훈련이 열릴 것이며 이집트는 이 훈련에 참가하는 중국 군함 12척에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가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발트함대 소속의 대형 상륙함 '칼리닌그라드'가 지중해를 지나 시리아 타르투스항으로 들어가 시리아에서 펼쳐질 군사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전혀 근거 없는 오보라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칼리닌그라드함은 (발트해 연안의 독일 항구도시) 킬(kiel)에서 열리고 있는 '킬 주간'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 행사가 끝나면 기지로 귀환할 것이며 어떤 추가적 항해도 계획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훈련이 열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최근 자주 나오는 그같은 오보는 시리아 사태의 추가적 악화를 겨냥한 것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사이반 고문은 이날 1년 이상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를 상대로 서방국가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목표는 시리아의 세속 정권을 전복하고 시리아를 강한 군대를 가진 국가그룹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반은 그러면서 서방은 시리아의 세속 정권이 무너질 경우 빚어질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권에 이어 누가 집권할지 이에 따른 결과는 어떨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세속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임. 그는 "거대한 정치·경제·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우리와 오랜 관계를 가진 유럽과는 달리 아랍국가들의 문화·역사·정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유럽인들은 그럼에도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을 찾기보다는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이반은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코피 아난 특사의 평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이 중재안은 시리아 지도부뿐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반군 양쪽 모두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난 특사의 중재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시리아에선 매일 10명 정도의 군인이 사망했지만 아난 특사가 파견되고 나서는 이 숫자가 30명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음.

#### ● <中, 이란 핵협상 평가도 서방과 '엇박자'>(6/20)

- 중국은 19일 종료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스크바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서방과 궤를 달리했다. 서방은 서로 분명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실망스런 반응이지만 중국은 "실용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장 조리(차관보)는 회담이 끝나고서 관영 신화통신에 "현존하는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대화의 길을 닦았다"고 말했다.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로 구성된 'P+1'과 이란 간의 회담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러위청 부장 조리는 "큰 차이"가 여전하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상대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회담 결과를 요약, 평가했다. 아울러 다음 달 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기로 합의한 기술적 실무협약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



시 말해 중국은 이스탄불 실무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P+1' 그룹과 이란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하는 모양새임.

-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P+1' 그룹의 분위기는 그와는 달라 보임.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극명함. 이란이 처음으로 현실적인 접근을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데서도 그런 기색이 묻어남. 기본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란이 농도 20% 수준의 우라늄을 농축한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처지임. 이를 이란이 겉으로는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기 때문임. 이들 4개국은 이란이 이미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반출, 포르도 농축 시설의 가동 중단을 주문하고 있음. 그런 반면 이란의 잘릴리 대표는 "모스크바 협상이 앞선 협상들보다 더욱 진지하고 현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그 농도와 상관없이 이란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음. 무엇보다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라는 해석임.
-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은 일단 'P+1'과 이란 간 회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은 서방 해법과의 '차별화'이고 이란에 대한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임.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권도 있고 국제의무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 브라질서 '리우+20' 정상회의 개막(6/21)

- 유엔 지속가능발전(리우+20) 정상회의가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시에서 개막했음. 22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리우+20'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정부대표, 국제기구 수장 등 190여 명이 참가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와 재계 인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이 참가했음.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20'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면서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음. 호세프 대통령은 특히 빈곤퇴치가 '리우+20'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우+20'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행사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리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려면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총액을 50억달러 이상으로 확



대하고, 올해 끝나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에 이어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행사(리우-92) 이후 10년마다 열리고 있음. '리우-92'는 지속가능 발전을 국제사회의 비전인 '어젠다 21'로 채택했음.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개념임. '리우-92'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3대 협약을 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에 합의했음.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리우+10)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빈곤, 물, 위생 등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음.
- '리우+20'은 '리우-92'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의제로 채택했으며, 폐막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임. 선언문에는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 총장과 호세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우+20' 결과물의 이행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 한·미·일, 제주 남방서 연합해상훈련 돌입(6/21)

-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이틀간 일정으로 2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시작됐음. 이번 해상훈련은 수색·구조, 해양차단 작전 등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됨.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세종대양함 등 3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군수지원함 등 10여척의 함정과 대잠 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해상훈련은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부터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되고 있음. 군당국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중국을 의식한 듯 설명을 자제하는 등 '로우 키'로 대응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해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해야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조지워싱턴호 위용(자료)그러나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다음 날 "한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이라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음.
- 한국과 미국은 이 훈련이 끝나면 23~25일 서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함. 평택 이남 해상에서 이뤄질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가 참가할 예정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북한의 수중 침투에 대응하는 대잠수함 작전과 수상함 자유공방 기동, 잠수함 탐지 작전 등으로 실시됨. 미국은 항모와 핵잠수함 등 항모전투단이, 한측은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수상함, 경비함 등이 각각 참가함.

#### ● 日, 핵무장 의혹 진화 거듭 시도(6/22)

- 일본이 원자력기본법에 핵무장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가 국내외의 의심이 커지자 그런 의도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음.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명기한 점과 관련해 "입법자(의원)와 내각, 정부의 해석이 분명하게 일치하고 명확한 만큼 확대해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법의 문구는 놔두고 정부의 유권 해석을 엄밀하게 하겠다는 의미임.
-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또 "정부는 (핵물질의 군사 전용을 막는) 보장 조치나 (핵 테러를 방지하는) 핵 안보 기능을 원자력규제위에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음.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원자력의 평화 이용 원칙인 비핵 3원칙의 견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와 여야는 20일 의결된 원자력기본법의 원자력 이용 목적(제2조)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는 우려를 샀음. 한편 에다노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 외에 다른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원자력규제위의 독립성이 국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규제위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음.

#### ● 대만, 분쟁 속 남중국해 영유권 재천명(6/22)

- 대만 정부가 최근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들 지역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남중국해 난사(南沙)·시사(西沙)·중사(中沙)군도와 동사(東沙)군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만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의 영토주권 주장을 어떤 이유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 외교부는 이어 "남중국해 관련 국가들이 주변의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사태 해결과 공동 자원개발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군사상의 요지인데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대만은 난사군도 최대 섬인 타이핑다오(太平島)와 동사군도에 해안



경비대 병력을 파견해 이들 2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 **태국 경찰, 메콩강 유역서 탈북자 19명 체포(6/22)**

- 19명의 북한인이 22일 태국 경찰에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경찰 소식통이 밝혔음. 체포된 북한인들은 여성 11명과 남성 8명으로,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80km 떨어진 치앙라이주(州) 메콩강 유역에서 선박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음. 소식통은 이들이 한국을 의미하는 '제3국행'을 원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방콕의 임시 보호소로 옮겨져 이들을 받아들일 국가가 나올 때까지 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이민국 관계자도 이들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음. 한국 입국에 앞서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메콩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음. 메콩강은 중국의 위난성(雲南省),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연결되며, 탈북자들은 태국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종종 태국으로 들어옴.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